

국힘, 단일지도체제 유지... '민심 반영' 20%·30%안 압축

당헌당규 개정 초안 오늘 비대위 보고... 민심 비율 비대위서 결정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6개월 전 사퇴' 당권·대권 분리 유지

국민의힘이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3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로 할지, 30%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당사

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여상규 위원장이 발표했다. 특위는 그동안 ▲대표 경선방식 ▲지도체제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 네 가지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

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산되는 집단지도체제와 대비된다. 대표 경선에 적용할 '당원투표·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30%, 20%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 선출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3대 3대 1이었다. 7명 중 3명이 민심

비율 30%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으며,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며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틀이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애초 비대위는 총선 참패 이후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세부 민심 비율을 높이는 특이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원내에서는 당원권 약화를 우려하며 '8대 2'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단일지도체제 유지 결정에 따라 당대표 경선 결선투표제에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크야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카자흐 핵심 희소광물 개발·협력 강화

尹-토크야프 대통령 정상회담... '北 비핵화' 공동성명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핵심 희소광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 방문을 계기로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크야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 발표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자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 기업들에 우선적인 개발과 생산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게 목적이다.

특히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全) 주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양국은 한국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공급량 증대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세계 시장점유율은 정상급이다. 우라늄이 1위로 43%, 이어 크롬(2위·15%), 티타늄(3위·15%), 비스무스(0.8%·5위) 등의 순이다. 또 원유·석탄 매장량은 세계 12위, 가스 16위 등 자원 부국으로 통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전략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전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효율 저배출 발전 ▲재생에너지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에너지 분야 협력과 정보공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에 대

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전수하고, 맞춤형 정책 자문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산림재난 관리·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도 추진한다. 이어 양국 교류·협력 증진 전략도 포함됐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국힘 '상임위 보이콧' 선언

"野 단독 처리 법안,尹에 거부권 강력 건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

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영터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쪽 의장이 만들어진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특별위원회장인 송인석 의원과 박대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과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한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중시 개정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